

최 신 판 례 예 규

Marketing Tax consulting

주된 납품계약에 대해, 별도 하청업체가 제공한
정비용역은 주된 재화의 부수용역 아님

방위사업청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군수품인
잠수함을 수입한 후 잠수함의 일부 구성장
비를 제작한 외국법인의 하청업체와 체결
한 별도 용역계약에 따라 정비용역을 공급
받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
역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
서면법령부가-6678, 2021.12.29

■ 질 의

- 방위사업청은 독일 ◎◎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잠수함을 수입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'21.7.8. 독일 □□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잠수함 추진전동기 정비 기술용역(이하 "본건용역")을 공급받기로 함
- □□사는 당초 ◎◎사와 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로 잠수함의 구성장비인 추진전동기를 제작하여 ◎◎사를 통하여 납품하였으며
 - 본건 용역은 기 수입한 잠수함에 대한 후속 군수지원차원에서 잠수함의 핵심구성품인 추진전동기의 정비를 위해 공급받는 것임

질의

- 정부가 군수품인 잠수함을 수입한 후 해당 잠수함의 일부 구성장비를 제작한 하청업체와 체결한 별도 용역 계약에 따라 정비 기술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

■ 회 신

정부가 외국 A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군수품인 잠수함을 수입한 후 해당 잠수함의 일부 구성장비를 제작한 A법인의 하청업체인 외국 B법인과 별도로 정비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B법인으로부터

용역을 공급받고 별도의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7조제15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
조정대상지역의 1주택(겸용주택)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,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

사전법령재산-333, 2021.12.31

■ 질 의

- 서울 소재 1주택(겸용주택)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'주택'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
 - 용도변경한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기산일이 기존건물의 취득일인지 또는 용도변경일인지 여부

■ 회 신

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(겸용주택)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,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「소득세법」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.

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의무 상 '정규직 근로자'의 범위에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

서면법규재산-4357, 2022.01.19

■ 질 의

- 2019년 7월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여 적용받음
- 기업기업의 정규직 근로자 중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였으나 해당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1년 미만 근무하다가 퇴직함

질의

- 기업기업의 정규직 근로자 중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였으나 해당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
 - 해당 근로자가 가업상속 사후관리 시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

■ 회 신

귀 서면질의의 경우,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중도에 퇴직하여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제15조제13항 본문 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,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, 실제 근로내용, 퇴직경위 등을 살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.

의료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% 상당액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의료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8조제2항제7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

서면법규법인-4818, 2022.01.18

■ 질 의

- A법인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의료사업 및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 등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,
 -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의료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으며,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음
- 한편, 일정한 공익법인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(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)에 사용하도록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8조제2항제7호가 개정되었음

(질의내용)

- 의료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% 상당액을 정관상 공익목적사업이자 수익사업인 의료사업에 사용하는 경우(병원건물이나 의료기기 등 자산 매입 포함)
 -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8조제2항제7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(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)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
■ 회 신

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, 의료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% 상당액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서 공익목적사업이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의료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8조제2항제7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.